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 “구직 큰 기대 없어”

■한경협,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60.5% 소극적 구직자…지식 등 추가 준비 이유

평균 13.4회 입사 지원…‘일자리 부족’ 최대 난제

전국적으로 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10명 중 6명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기술·지식 부족에 따른 추가 준비’가 꼽혔고, ‘일자리 부족’이 취업 준비 과정의 최대 난제로 조사됐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60.5%)은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극적 구직자 비중은 구직활동 실태에 대한 응답 중 △의례적 구직(32.2%) △거의 안 함(21.5%) △쉬고 있음(6.8%)을 합한 수치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역량·기술·지식 부족에 따른 추가 준비(37.5%)였다. 이어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22.0%) △전

공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 부족(16.2%) △적합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 부족(13.6%)을 꼽아 응답 학생 절반 이상(51.8%)이 ‘일자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 대학생 10명 중 4명(37.1%)은 올해 대졸 신규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36.5%)보다 0.6%p 높은 수준이다.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대학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해 평균 2.6회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9.4%로 지난해 합격률(22.2%)보다 2.8%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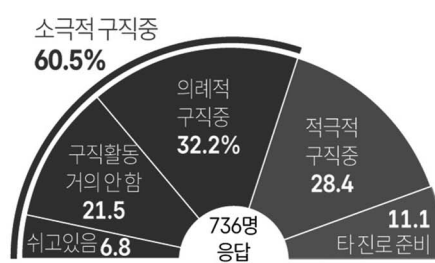
올해 입사지원 횟수는 △1~5회(40.7%) △6~10회(15.8%) △21~25회(12.0%) 순으로 나타났다. 서류전형 합격 횟수는 △1회(25.4%) △모두 불합격(19.1%) △2회(16.3%) 순이다.

취업준비생 취업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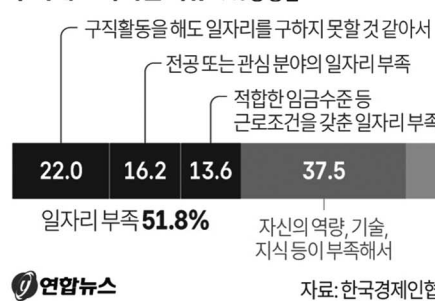
조사 결과

2025년 10~11월 전국 4년제 대학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2,492명 대상 조사

구직활동 실태



구직에 소극적인 이유



대학생 10명 중 6명(62.6%)은 취업준비기간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중 ‘1년 이상’으로 내다본다는 응답 비중도 32.5%에 달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20~34세) 미취업자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 비중은 55.2%로, 최근 3년간 2.0%p(2022년 53.2%→2025년 55.2%) 증가했다.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으로 ‘일자리 부족’(50.1%)과 관련된 응답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입채용 기회 감소(26.9%) △원하는 근로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23.2%) 등을 꼽았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선 과제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여건 개선(29.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진로지도 강화, 현장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18.1%)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기회 확대(1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환율·고물가, 통상질서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노동시장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규제 완화 및 세제·투자 지원을 통해 기업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청년연장 등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aT, 식량위기국가에 쌀 원조

15t…역대 최대 식량원조협약 이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부산항에서 나미비아로 가는 1632t의 해외원조 쌀 출항을 끝으로,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른 15만t의 쌀 원조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한 후 aT를 식량원조 실행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쌀 5만t을 원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10만t으로 원조 규모를 늘린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인 15만t을 연내 차질 없이 지원하며 식량 위기에 처한 17개국에 식량을 지원에 나섰다.

이번 원조에는 지난해 수교를 맺은 쿠바를 포함해 나미비아, 타지키스탄, 레바논 등 신규 수원국도 포함됐다.

전달된 쌀은 난민, 강제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818만명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인도적 식량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로헝거(Zero Hunger)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aT가 힘을 보탤 수 있어 영광이다”며 “원조 쌀 15만t을 원활하게 출항시킬 수 있도록 가공, 운송, 선적, 검역 등 절차마다 도움을 준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쿠팡 이탈’ 닷새만에 200만명 감소

일간 활성 이용자 1500만명대 후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쿠팡 이외의 지마켓을 포함한 다른 주요 이커머스 이용자는 이탈 초기지만 해도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다시 지난달 평균 수준으로 원상 복귀했다.

9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아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594만7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지난 1일 1798만8845명에 비해 204만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

유통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달 24~29일 일평균 이용자 수는 1600만명대 안팎이다. 이와 비교하면 이용자 이탈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이용자 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나흘 만에 감소세로 바뀐 뒤 계속해서 이탈자가 나온 것이다.

일간 이용자 수도 지난달 30일 사상 처음 1700만명대를 넘어선 뒤 지난 4일 1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가 이번엔 1500만명대로 더 축소됐다.

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1500만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달 28일 이후 8일 만이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탈이 지속에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개인정보 노출이 대규모 유출 사태로 확산한 지난달 29일 이후 로그인과 비밀번호 확인 또는 회원 탈퇴 방법 모색 등 점검 차원에서 쿠팡 앱에 접속한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 1일 역대 최고 이용자 기록을 세운 뒤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마켓을 비롯해 다른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이용자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가 다시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쿠팡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 지마켓 이용자 수는 136만6073명이었지만 지난 3일에는 170만7456명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이후 지마켓 이용자는 소폭 감소해 지난 6일 기준으로는 140만6619명에 머물렀다.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이탈 초기지만 해도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지만 지난 6일 기준 이용자 수는 지난달 30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9일 서울 피스엔파크 컨벤션에서 ‘제로트러스트·통합보안 서밋’을 개최했다.

인터넷진흥원, 보안체계 도입 논의

제로트러스트·통합보안 서밋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9일 서울 피스엔파크 컨벤션에서 ‘제로트러스트·통합보안 서밋’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 산·학·연·관 보안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민간이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새로운 보안체계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제로트러스트 및 통합보안 모델의 개발·실증을 수행한 보안기업과 수요처가 추진 성과를 발표하며 보안 모델의 상생 개발·연동 과정을 설명했다.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소개된 ‘제로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해설서’는 기업의 제로트러스트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석준 가천대 교수, 배한국 한국제로트러스트위원회(KOZETA) 의장, 이재웅 국민은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국내 보안 분야 주요·공공,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경제 중심의 보안의 한계, 데이터·사용자 검증 체계 전환, 인공지능 기반 위협 대응 자동화, 분산된 보안 환경의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국내 기업 간 연동·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돼 내년 본격 운영을 앞둔 ‘정보보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공유 플랫폼(포털)’의 최초 공개도 이뤄졌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인공지능 시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이 스스로 보안 역량 강화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보안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

전남 영광·해남, ‘농촌서비스 협약’ 첫 시범지로 선정

주민주도 생활서비스 모델 구축 본격화…새로운 돌봄 체계 가동

영광과 해남이 정부의 ‘농촌 서비스 협약’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며, 주민이 직접 생활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하는 새로운 농촌 돌봄·생활서비스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광·해남을 포함한 6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뽑고, 2026년부터 서비스 공급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마을협동조합 등 주민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재정·사업·인프라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모사업 중심의 공급체계가 가진 한계를 넘어, 실제 생활권의 수요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구

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식사 지원, 세탁 지원, 교육·돌봄 등 주민 일상에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가 공동체 주도로 공급된다.

전남에서는 이미 공동체 기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시범지로 선정됐다. 해남군은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꽃매협동조합·종도리협동조합 등이 식사·세탁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광군 또한 협약 기반 서비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갖춰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공동체 활동 이력과 중간지원조직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비스 공급 역량이 높은 시군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각 시군과 서비스 공동체는 지역 내 수요와 우선순위를 정밀 조사하고, 읍·면 단위 생활여건 및 가용 자원을 기반으로 서비스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4분기 중 지방정부와 공동체가 협약을 체결하면 공동체는 계획에 따라 생활서비스를 실제 제공하게 된다. 협약 종료 후에는 수혜자 수, 전달체계, 사업 간 연계 등 성과가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촌 협약 제도·사회서비스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제도”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협약 체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나주-KISA, 중기 정보보호 예산 23억 증액

지역 현안 인식…상생협력 모델 평가

나주시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체 내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관련 국고 예산 23억원 증액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는 최근 SK텔레콤과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안 체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9일 밝혔다.

진흥원의 정보보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보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와 진흥원은 예산 심의 기간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중소기업의 보안 체계 미비가 전 국민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중앙 부처의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졌고, 내년도 정보보호 사업 예산 23억원 증액이라는 결실을 만들었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 현안을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만든 상생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예산 증액이 중소기업 보안 울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